

朴대통령-특검팀 대면조사 '막판 힘겨루기'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측과 대면조사를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양측은 9일 대면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이뤘지만, 이 날짜가 공개되면서 상황이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과 박 대통령측은 1월말께부터 대면조사의 시기와 방법, 장소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양측은 대면조사 날짜는 9일, 장소는 청와대 경내로 사실상 합의를 이루고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 막판 조율을 벌이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 측은 현지 대통령이 조사를 위해 청와대 밖으로 나가는 것은 모양새가 매우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경내에서 진행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당초 '늦어도 2월초'로 못박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장소 등 구체적인 문제를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날짜·장소 사실상 합의... 공개여부 쟁점

'9일째 조사' 일부 언론 날짜 공개에 상황 급반전

박 대통령측 '전면 재검토' 까지 거론... 특검 '곤혹'

하는 기한 내에 실질적인 대면조사가 이뤄지는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

막판 쟁점은 대면조사의 비공개여부였다. 박 대통령측은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신문을 유지하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과정이 세세하게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데다가, 세부 진술 내용이 알려질 경우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내부검토를 거쳐 일단 양측이 합의한 '이번주 후반에 대면조사를 실시한다'에 해당하는 내용인 '10일 언저리'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7일 발표했

다. 이후에도 특검팀은 대면조사 이전에 날짜와 시간을 공표하는 방법, 압수수색처럼 대면조사가 시작된 직후 언론에 알리는 방법, 대면조사가 끝난 이후에 주요 진술 내용과 함께 발표하는 방법을 놓고 검토를 이어왔다.

하지만 9일이라는 대면조사 날짜가 공개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박 대통령 측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고, 특검팀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이를 빌미로 대면조사 시기를 미루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박

대통령측 내부에서는 대면조사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강경한 기류까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하는 기한 내에 대면조사를 이루기 위해 형식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양보를 해온 특검팀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이에 따라 양측은 대면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9일을 하루 앞두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만큼 다시 이를 뒤집는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박 대통령 측이 재검토하거나 연기하자고 주장할 수 없도록 여론 등을 지렛대로 압박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날짜가 공개되면서 대면조사가 유동적으로 변경될 면이 있다"며 "대면조사 시기와 장소, 비공개 여부 등을 포함해서 조율을 좀 더 해야 할 상황이고, 모든 게 유동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뉴스

원광대·전주대 건축학 교육인증

장학수 의원, 지난 2015년 6월

5분발언 통해 문제점 지적

건축학 교육인증에 노력을 기울여온 장학수 도의원이 원광대와 전주대가 건축학 교육인증을 받게 되어 도내 건축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전라북도 건축업계의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낼 계기를 마련했다.



장학수 의원

건축학 교육인증 문제는 지난 2015년 6월, 제32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의회 장학수 의원(국민의당 정읍1)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광대와 전주대의 5년제 건축학과 중 단 한 곳도 건축학 교육인증을 받지 못해 전라북도의 건축학계의 위기는 물론 해당 대학의 건축과 졸업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각 대학의 지극적 노력과 도내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도내 대학 중 5년제 건축학 과정을 개설 중인 학교는 원광대학교와 전주대학교 두 곳 뿐이다. 이번에 두 대학이 각각 건축학 교육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침체된 도내 건축설계 업계에 청신호가 켜지게 되었으며 두 대학을 졸업한 건축학도들이 설계사무소에서 3년만 실무경력을 쌓으면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증진됨으로써 도내 청년인구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예정이다.

원광대는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월 31일에 교육인증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전주대의 경우도 2년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7년 1월 31일에 건축학 교육인증을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그로 인해 인증년도를 기점으로 5년 이내 기 졸업생들까지 인증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원광대, 전주대 건축학과 졸업생 약 250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음=김대환 기자

문재인 "2월 탄핵선고 무산 朴, 노골적인 현재 무력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탄핵심판 결정이 추가 채택되면서 2월말 탄핵심판 결정이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박 대통령은 헌법유린 국정농단도 모자라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2월 선고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당하게 심판에 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통령직만은 유지하려는 뒤통수짓 한 태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박 대통령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헌정질서 문란을 하루빨리 바로잡을 책무가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심판을 내려 달라.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다시 국민의 힘을 모을 때"라며 "빛이 어둠을 이기는 위대한 촛불혁명이 끝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 달라. 저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밝힌, 광화문 촛불집회 재참여 방침을 강조했다. /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월 탄핵 결정이 무산되면서 판결 지연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한 대책 논의에 나섰다.

야3당 "'야권공조' 복원, 탄핵안 인용 압박해야"

추미애 "국민 모두 공감"… 박지원 "탄핵 인용·특검 연장돼야"… 심상정 "총력전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월 탄핵 결정이 무산되면서 판결 지연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탄핵안 가결 당시의 '야권공조' 복원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한 대책 논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야3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초 탄핵안 가결을 위해 야3당이 촛불집회 참석을 당론으로 결정했던 것처럼 '야권공조'를 복원, 현재의 조속한 탄핵안 인용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 12월 탄핵 직전 탄핵 찬성여론은 78%대였고, 국회는 정확하게 78%의 찬성률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해가 바뀔 올해에도 탄핵 찬성여론은 78%를 유지되고 있다"며 "어떤 사안에 대해 이렇게 일관되고 견고한 여론이 뒷받침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절박하고 시급한 상황이란 것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민심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현재를 압박했다. 그는 "다시 한 번 현재의 조기심판, 특검 기간연장을 위해 야3당이 힘을 모으겠다"며 "민주당은 대보를 촛불과 함께 촛불심심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음을 박 대통령과 그 호위세력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대표 또한 "탄핵은 인용돼야 하고, 특검의 수사기간은 연장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현재에 끝수를 부릴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추하지 않은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10명 중 8명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현재는 박 대통령 측의 꼼수에 넘어가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대로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헌법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면, 현재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것이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며 "박 대통령의 탄핵은 현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인용돼야 하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하게 씻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대표는 "박근혜 소장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 심리를 마치지 않으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지 않았느냐"며 "설마가 아니라 모든 것이 그 말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이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새누리당이 비합리성을 하면서 '탄핵기각'을 외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박 대통령이 탄핵을 기각하고 직무를 복귀하려는 생각이 아니겠느냐"며 "야3당의 탄핵공조를 시급하게 복원해야 한다. 바른정당까지 함께 모두 힘을 합쳐 탄핵안이 인용될 때까지 총력전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

손학규 "朴-수구세력, 순순히 탄핵심판 임하는 게 마지막 도리"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8일 헌법재판소의 2월말 탄핵심판 결정이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나라를 결단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국민을 또다시 분열시키지 말고 순순히 탄핵심판에 임하는 게 마지막 도리"라고 일갈했다.

손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은갖 음모론이 난무해 나라 전체가 뒤숭숭하다. 박근혜 정권의 패권적이고 불명치한 그간 행태를 감안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 주위의 수구세력에게 경고한다. 탄핵결정을 저지하겠다는 헛된 시도를 당장 멈춰라"라며 "당신들의 행동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건전한 보수세력까지 파멸시키는 짓"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을 추가해 탄핵결정이 지루 늦어지고 있다.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은 불안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장은 아울러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정치권 안팎의 탄핵연대 세력이 긴장을 늦추지 말고 민심을 호도하고 음모를 꾸미는 수구세력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헌법재판관들은 국민들의 불안감과 의구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탄핵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각자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장에서 촛불을 밝혔던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다시 한 번 되새겨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뉴스

고영태 '잠수'... 탄핵심판 증인신문 불투명

오는 9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도 고영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8일 "현재까지 고씨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난날 17일과 25일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획했지만, 소재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부득이 오는 9일로 또다시 증인신문을 연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는 지난 6일 고씨

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현재는 사무처 직원을 법원에 보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고씨에게 출석요구서 송달을 시도했다.

하지만 고씨가 법원 직원을 통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대신 별도로 연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전달하지 못했다.

고씨가 7일이나 8일째 본인이 직접 현재로 연락하겠다는 뜻을 밝혀 탄핵심판 증인 출석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

는 관측도 제기돼 왔지만, 이마저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는 9일 열리는 12차 변론에 고씨와 고씨가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박현영 과장, 조성민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상태다.

고씨가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고씨 대신 노 부장과 박 과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회 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 측이 지난 3일자로 현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과 지난날 1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재판부 석명 요청에 따른 답변서를 빈박하는 준비서신 2건을 전달 제출했다. /뉴스

김관영, "박근혜정권, 한국을 빗대며 올려놓아"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운용 실적을 분석해 공개함으로써 경제 패관 장본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우회 지원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 1300조원, 국가채무 643조원 등 대한민국을 빗대며 올려놓은 정권"이라며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하고, GDP대비 채무비율을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박대통령의 공약은 공염불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 채무의 경우 참여정부 5년간 84.3조원, 이명박 정부 92.6조원이 증가한데 반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미 약 120조원이 늘어 2월 현재 643조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실패, 대외무역 수출 규모 축소, 경제성장률 하락, 청년실업률과 노인빈곤율 고공행진 등 주요 경제지표가 김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덧붙여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축이 오는 6월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소 존치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측이 기대하는 연간 비용 절감 효과가 460억 원에 불과한 반면, 사회적비용 중 하나인 종사자 6,000명에 대한 실업급여만 약 700억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사기업의 경영상의 결정이라며 그 여파에 대해 추해도 안하고, 나몰라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전북도는 군산조선소 매물비용이 약 2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인재용 기자

2월 탄핵 무산... 바른정당 '시간끌기 안돼'

새누리 "文, 촛불 분노 유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측 추가증인 채택으로 2월 탄핵 결정이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바른정당은 8일 "대통령과 법률대리인단은 국민을 우롱하는 탄핵심판 시간끌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재의 조속한 심판을 촉구하며 "촛불혁명"을 언급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법률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시간끌기가 도를 넘고 있다. 계속되는 증인폭탄에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탄핵심판 시간끌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현재 결정은 공정성 위한 선택으로 이해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달래지는 못했다"며 "현재에 비한다. 탄핵정국이 서둘러 종식되고 국정이 정상화되길 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탄핵정국 선동을 위해 대보름일 촛불을 기점으로 조기 탄핵과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탄핵선동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박 대통령은 헌법유린 국정농단도 모자라 현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빛이 어둠을 이기는 위대한 촛불혁명이 끝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그저 대권욕심에 대한민국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문 전 대표도 그저 자신에게 쏟아질 검증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촛불의 분노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